

#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관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Ⅱ)



이 태 호  
농림수산부 축정과

## 4. 우리나라의 관측제도

### 가. 농업관측

#### •연혁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정치와 6·25동란으로 국가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가 5.16군사 혁명으로 빈곤타파 슬로건 아래 농업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때를 같이하여 1962년 5월에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농림부에 농업관측사업 실시에 관한 의장지시각서가 시달되면서 농업관측제도를 검토하게 되었다.

그후 각계 의견과 제도도입에 관한 여론수렴을 거쳐 1967년 1월에 농업기본법 제정과 함께 농업관

측 실시조항이 설정되어 농작물에 대한 관측업무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 나. 축산관측

####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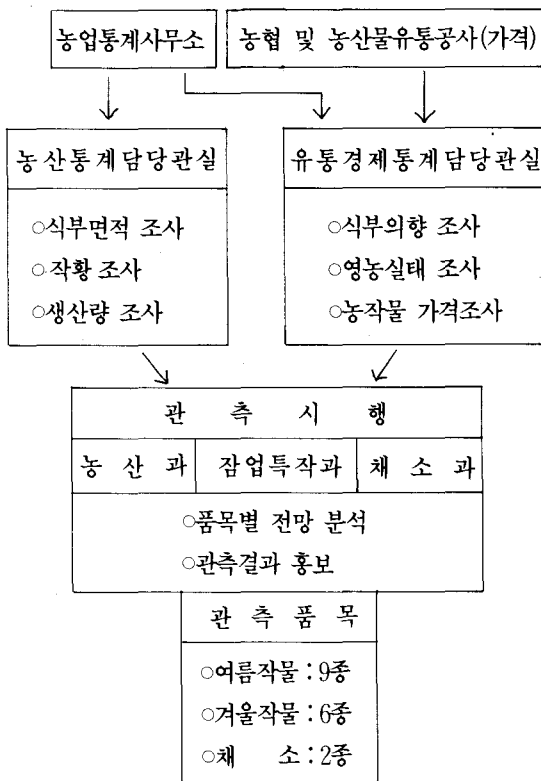
축산관측은 축산진흥회가 설립된 다음해인 79년에 극심했던 양돈불황이 계기가 되어 축산에도 관측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된 농업관측의 기법이 착수되었다.

이때만 해도 농림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기구·예산 등 제반여건으로 보아 축산관측을 농림수산부에서 직접 관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축산진흥회(현 축협중앙회의 전신)에 관측 전담과를 신설(전담직원 4명)하여 축산관측 업무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80년 2월이었다.

축산관측 대상품목은 생산기간이 짧고 증식이 빠르며 가격진폭이 큰 돼지를 기초로 하였고 점차 육계, 산란계 및 한우를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농업관측 체계(농작물)**



• **축산관측내용**

우리나라의 축산관측은 그 연혁이 매우 짧아(10년) 관측품목도 적고 관측범위나 내용면에서도 미천하지만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양축농가(특히 양돈)의 불황예방과 극복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관측업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나 예

산 지원 등에서 볼 때 아직은 기반구축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측내용은 축종별 사육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수요전망과 가격전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매분기별로 향후 3~9개월의 사육두수 및 축산경기를 전망하는 단기 관측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 **축산관측 방법**

산업화가 빨라지고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개별 산업에 미치는 요인들도 그만큼 가변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래의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예측을 하는 데는 경험적 판단에 의한 방법과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종합하여 활용하는 절충방법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각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활용하는 절충식을 이용하고 있다.

즉, 과거통계자료를 계량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회귀분석방법에 의거, 컴퓨터로 분석하여 앞으로 비슷한 환경하의 예측에 필요한 관측모형을 만들고 여기에 미래에 예상되는 요인들을 가미시키면 수요·공급량이나 가격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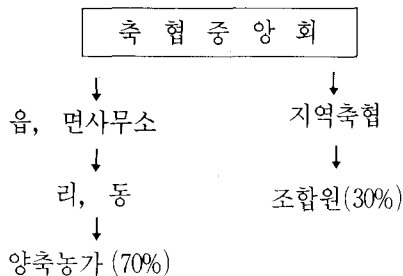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회귀분석방법만으로는 계량화가 가능한 요인들만 반영될 뿐 질병, 기후조건, 기호도 정책의지 등 계량화할 수 없는 것들은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양축농가들의 의향을 조사 분석하고 질병발생 상황정도, 각종여론 등을 종합분석하여 축산관측(안)을 작성한 다음 이 안을 축산업에 관계하는 교수, 양축가, 유통업자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축산관측 협의회」에 상정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축산관측 결과를 확정 발표하고 있다.

• **축산관측 홍보**

축산관측보는 매분기 20만부를 발간하고 중요한

변동상황이 예상될 때에는 축산유통 예고 전단을 20만부 발간하고 있으며 TV, 라디오, 신문, 전문 관계잡지를 통하여 해설·홍보를 하고 있다.

축산관측보와 유통 예고 전단 배부체계는 다음과 같다.



## 5. 축산관측의 문제점

### • 축산관측 이용자들의 인식부족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아직도 축산관측 내용과 같이 같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문제임(축산관측은 양축농가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지침제공 기능이지 일기예보와 같은 기능이 아님)

### • 관측기법 개발 미진

—생산(사육수수) 위주의 관측→유통, 소비단계까지 관측 확대 필요

—단기(3~9개월)관측→양축농가의 장기관측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

### • 관측전담기구 및 전문인력 부족

—현재 축협중앙회에 위촉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부족(현재 3명)

### • 정부의 예산 뒷받침 미흡

—국비지원은 없고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90 지원 : 7500만원)

### • 관측결과에 대한 정보 전달방법 개선 필요

—현재 읍, 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어 양축가 밀착 홍보 지남.

## 6. 축산관측 개선대책

### 가. 축산관측제도 개선의 필요성

서두에서도 잠시 언급했거니와 최근 UR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지난 2월 26일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에서 가급적 협상을 조기에 타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3월 31일 개최된 농산물 협상 실무급 회의에서는 향후 협상 방식으로는 각 의제별로 기술적 쟁점 사항을 분리하여 중점 토의하기로 하고 있다.

현재 참가국들의 주요 입장을 보면 미국은 92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92년 4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UR협상을 타결지으려 하고 있고 EC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보조감축, 소농에 대한 직접 지불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을 중심으로 내부적인 논의를 계속하면서 UR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협상에는 계속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을 쌀에 대한 개방불가 입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국과 활발한 막후 협상을 하고 있다.

더욱이 걸프전 종전으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개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입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UR협상 대응이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수입개방 품목의 확대와 개방에서 품목에 대하여도 조기개방이 불가피해 될 것으로 보여 우리의 자구책 마련이 조급해지고 있는 실정임을 양축농가들은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제화에 밀려 어쩔 수 없는 개방이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면 우리의 각오도 민첩하게 움직여져야 할 것이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대응력을 높여 주는 것이 아닐진대 또 그것이 외세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한 것이라면 정부에 모든 기대를 걸기 보다는 양축농가 스스로가 냉철한 비판과 각오로 대책에 임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빠른 움직임에 대한 축산시책의 대응체제와 함께 축산관측제도도 미래 지향적으로 신속히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 나. 축산관측제도 개선

### • 개선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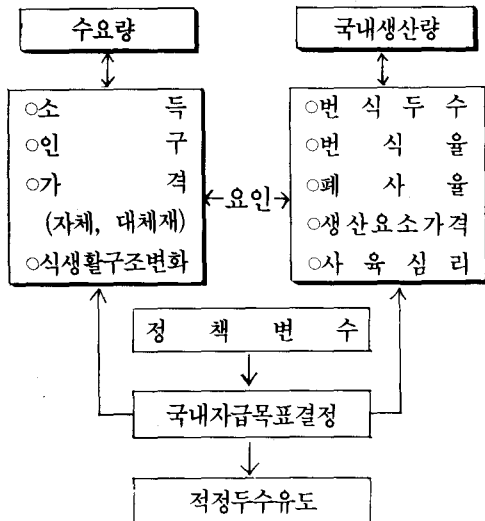
축산관측은 국내 통제경제체제하에서 어떤 일면에서는 안일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자성하면서 앞으로는 축산관측제도를 자유경제체제와 시장개방 대응체제로 개편하여 불안한 양축농가들에게 장단기 지표를 제공하고 나아가 축산물 생산의 사전적 조절과 가격안정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부터 우리나라 축산관측제도를 대폭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다. 구체적 개선 대책

### • 축산관측 품목 확대

현재 한우, 돼지, 육계, 산란계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급 등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젓소를 추가하여 관측대상을 5개 품목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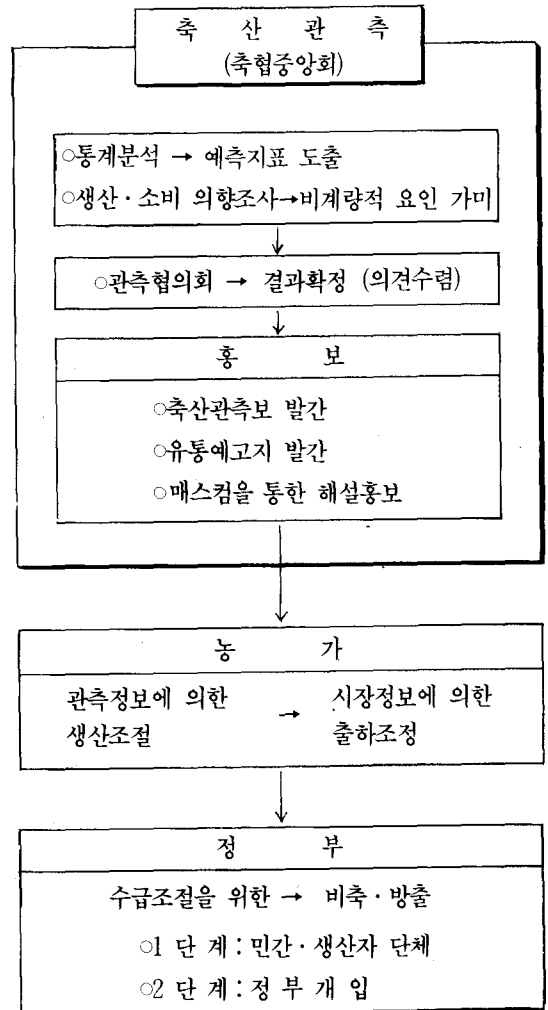
### • 적정두수 유도과정



### • 품목별 전문관측제 도입

현재 대부분기별로 전품목을 종합관측하고 있으나 각 품목별로 생산기간의 장·단기성, 계절적인 수요편중 등의 특수성으로 시기를 일실하거나 불필요한 시기에 관측을 하는 등 양축농가의 신뢰도와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품목의 특성을 감안, 품목별로 전문관측을 시행할 계획이다.

### • 축산관측과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의 기본 구상



### • 관측범위의 확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측은 주로 사육두수 생육 가격 등 생산위주의 관측에 치우쳤으나 이를 유통 단계, 소비단계까지 확대하여 생산전망과 수요(소비)전망을 조명하고 관측결과를 토대로 양축농가들이 스스로 경영계획을 조절할 수 있도록 관측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대가축, 중소가축 할 것 없이 모두 3~9개월 단기전망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한우, 젓소 등 대가축의 경우는 향후 2년, 돼지는 향후 1~2년, 닭(육계, 산란계)은 향후 1년 이상의 중기전망을 병행·실시하는 한편, 5개년 단위로 향후 10년의 장기전망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품목별, 계절별 특색을 고려하여 관측시기를 한우, 젓소는 연중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줄이고 돼지, 산란계는 계절별로 실시하되 실시월을 조절하고 육계는 생산기간을 감안하여 2개월 단위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 관측기술 향상 및 모델 개발

직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매년 국내외의 축산관측관련 학문을 수강토록하는 한편 AOC-CCM(세계 농업관측 협의회)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국제정보를 수집하고 품목별 사육(생산) 유통, 소비, 가격예측을 포함하는 새로운 모델을 전공교수,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주어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축산관측위원회도 품목별 분과위원으로 재편성하여 전문화하고 국내 전문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관측기법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 축산관측 전담기구 보강

현재 축협중앙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축산관측기구는 앞으로 전개될 자유경제체제와 시장개방시대에 대응하기에 너무 빈약하므로 축산관측과를 대폭 확대하여 품목별 전담기구로 개편하고 소요

비용은 축산진흥기금 사업으로 매년 3억원 수준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P.C 미니컴 등 관측장비를 보강하여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 • 관측홍보체계 개선

우선 현재 전품목을 종합하여 매분기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관측홍보체제를 품목별, 계절별 특색을 고려하여 전문 홍보체제로 전환하고, 축산관측보배부체제도 읍, 면을 통하여 양축농가에 배부하던 것을 시, 군 축협을 통하여 축종별 양축농가에 직접 배부함으로써 대농가 밀착홍보가 되도록 대폭 전환할 계획이다.

## 7. 맺는말

우리나라에 축산관측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0년으로서 미국(1922년 시행)보다 58년이 뒤지고 일본(1952년 시행)에 비해서는 28년 그리고 대만(1972년 시행)보다는 8년이나 늦게 도입되었다.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가격변동과 생산과잉에 의한 호·불황의 예견 등 정책수행의 한 수단으로서 알게 모르게 큰 역할을 해 왔다.

이제 비록 그 역사는 짧더라도 그동안에 쌓아온 노력과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정확하고 양축농가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관측이 되도록 관측제도 개선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축산관측의 목적이 그렇듯이 '양축농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명하게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이와같은 제도는 정부나 양축농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상호신뢰도가 바탕이 되어 성숙되고 발전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연재 끝>